

7일 Market Index			
↑ 코스피	2647.62	↓ 코스닥	863.37
	(+6.13)		(-7.30)
↓ 금리 (연율)	3.321	↓ 환율 (원/달러)	1330.90
	(-0.004)		(-3.60)



m-커버스토리

‘현역불패’ ‘비명횡사’ 인적 쇄신은 없었다

22대 총선 공천결과 분석

7일 기준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3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거대 양당의 공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매번 총선이다가오면 정치권에서는 ‘물갈이’와 ‘혁신’, ‘쇄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된다. 국회의원 자리에 달린 권한을 ‘기득권’이라고 보는 시선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기득권을 가졌으니,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정령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교체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기본 의식이다.

여론 절반 이상 ‘현역 교체’ 응답 22대공천 유권자 요구 충족 못해 여당 ‘현역불패’ ‘친윤공천’ 비판 야당도 교체율 20% 정도 불과

거기에도 임기를 세 달 정도 남겨둔 21대 국회는 극한 대립과 정쟁을 거듭했다는 평가와 함께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도 얻었다. 그러다보니 ‘교체’에 대한 열망이 더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8%가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현재 의원이 다시 당선되면 좋겠다’는 응답은 28%였다.

특히 여야 텃밭에서는 현역의원들에 대한 교체 의견은 절반 이상이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에선 현역의원 교체 요구가 56%였고,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선 51%를 기록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22대 총선 공천 결과를 살펴보면 ‘새 인물’을 원하는 유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공천 과정에서 ‘현역 불패’, ‘비명횡사’ 등의 단어가 등장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우선 국민의힘은 ‘텃밭’ 공천에 손을 대기 전까지는 비교적 잡음 없는 공천을 이어갔다. 지역구 의원 중 친



지난달 28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용화여객차 동차 차고지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홍보하는 ‘버스타고, 정책보고, 투표하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스시스

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윤한홍·이철규·추경호·이양수 의원 등이 단수 공천을 받거나, 경선을 실시하더라도 생환했다. 거기다 경선에서 정우택·박덕흠·이종배 등 현역의원이 다수 살아남았다. 오히려 지역구 초선 의원들이 경선에서 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당 공천은 ‘현역불패’ ‘친윤공천’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다만 ‘쌍륙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클럽) 재표결 이후 줄줄이 발표된 강남·TK 등 텃밭 지역구 공천에서 교체가 결정된 현역의원들이 생겨났다. 일각에선 “‘현역불패’ 비판에 비주류만 날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텃밭에서 교체 여론이 높았던 만큼, 여당 강세 지역의 공천 및 경선이 끝나면 교체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역구 현역의원 중 불출마 선언·컷오프(공천배제)·경선탈락·탈당 등을 포함하면 교체율은 20%정도다. 국민의힘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민주당은 253개 지역구(21대 기준) 중 141석(현재, 탈당자 제외)을 갖고 있는 만큼, 현역이 본선행 티켓을 따내는 경우는 40%에 달했다. 익숙한 얼굴이 40% 가량 포함돼 있는 셈이다.

다만 민주당도 역시 텃밭인 호남에서 현역의원이 대거 탈락했다. 7일 기준으로 광주외의 경우 현재까지 경선이 실시된 지역은 민형배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현역이 패배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당사자 의견 미수렴·사직 목적 등 쟁점

법적분쟁 옮겨간 의대증원 교수협의회, 복지부장관 결정 무효 집단행동 판단에 개별적 사유 반박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가 법적 분쟁으로 옮겨붙고 있다.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단체 소송에 이어 개별 취소 소송, 집행지 가처분 신청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원이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과 그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대교수 협의회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전공의에 대한 법적 처벌이 진행되면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교수 협의회는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을 늘리는 건 교육부 장관의 소관인데 입학 정원 증원 결정은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증원 결정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들, 전공의들, 의과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도 위험이라고 보고 있다. 같은 이유로 개별 대학 단위에서도 의대 증원 반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화되면 이에 따른 개별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2주간 주어지는 소명기간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전공의

들은 면허가 정지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에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 세력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15조 제1항이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여기도 쟁점은 남아 있다. 전공의가 사직을 한 것을 개별적 사유에 의한 단순 사직이나 목적을 위한 집단행동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판단하지만, 의사들은 이를 ‘개별적 사유’라고 반박하며 정부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추진되면서 올해 수험생은 물론 직장인까지 의대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학원가를 찾고 있다. 한 대형 입시학원은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직장인도 수강할 수 있는 야간특별반을 개설해 이달 중순 개강을 앞두고 있다. 7일 서울의 한 대형학원에 마련된 의학계열 수능 강의 야간특별반 관련 입강반 모습. /뉴스시스

첨단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 5년간 60배 심화

의대 쏠림 가속화 땀 초격차 흔들 해외 기술협력, 주요국 대비 최하위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 인원이 향후 5년간 60배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해외 기술협력도 주요국 대비 꼴지 수준으로 나타나,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의대 증원 논란과 맞물려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경우, 첨단산업 분야 인재 확보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가 7일 발표한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절대적 규모는 명목 PPP(구매력 평가) 기준 1196억달러로, 미국의 7분의 1, 중국의 6분의 1, 일본의 3분의 2 수준이다.

개별 국가단위의 예산·인력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나 기술 교류 등 글로벌 기술협력도 미국, 영국 등 주요국 대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0년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국외협력 논문은 총 2만7281건으로, 이는 미국의 8분의 1, 중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별 총연구

개발비 중 해외 재원 비중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다.

보고서는 저출산 등으로 과학기술 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확대돼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인력수급 문제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인원은 2019년 기준 인구 만 명당 39.0명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29위에 머물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인 49.2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한동훈 “중앙정부가 지방 직접 지원할 법률 개정안 발의할 것” /사진 뉴스시스
- ▲ ‘소나무당 창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연합에 협상 제안

- ▲ 정당 공천평가, 국힘 ‘못한다’ 42%, 민주 ‘못한다’ 53%
- ▲ 여 공관위, 인요한에 비례대표 요청… “본인 의지에 달려”



- ▲ 개혁신당, 스포츠투토 규제 완화 공약 발표
- ▲ 이재명, ‘비명횡사’ 논란에 “당원·국민이 뽑은 혁신공천” /사진 뉴스시스